

# ‘관세 쇼크’ 가상자산 시장 강타…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 7만9900달러 거래  
전일 10% 급락, 3% 상승 일부만회  
알트코인, 연중 최고가 대비 57% ↓  
‘관세전쟁’ 협상면 일부 회복 관측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쇼크’ 여파에 가상자산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일 보편관세 시행에 이어 오는 9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위험자산 투자가 위축된 모습이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았던 가격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8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약 7만9900달러(1억175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 오른 수준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가량 급락한 전일의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데 그쳤다. 1월 22일 기록한 연중 최고가인 10만6100달러와 비교해선 24.7% 내려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준을 지속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두드러졌다. 이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1587달러에 거래되며 연중 최고가 대비 57%의 하락을 기록했고, 시총 3위인 리플은 1.90달러에 거래돼 42% 하락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표한 보편관세·상호관세가 지체없이 시행될 것이란 전망에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와 대(對)미 무

역 흑자가 많은 25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보편관세는 지난 5일 발효됐고,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된다.

보편관세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보다 앞선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뜻을 밝으면서 위험자산이 급락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코스피는 5.25%, 일본 닛케이 지수는 7.76% 내렸고, 유럽 증시도 4~5%대 하락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과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증시를 비롯한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지만, 때때로는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보다 앞선 협상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지만, 사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협상 조건으로는 대(對)미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는 관세의 협상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관세는 영구 조치될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는 관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 외국이 단았던 무역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24%, EU에 20%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무역장벽 완화를 조건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EU도 주류 등에 대한 보복관세 예고를 철회하고,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 완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시장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일부 국가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는 소식이 가상자산 가격이 잠시 반등했지만, 오보라는 소식이 가격이 다시 하락 전환했다”라면서 “향후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가격도 일부 회복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한국은행,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고용률 유지면 10년간 노동 141만명 ↓  
정년연장에 9년간 청년고용 6.9% ↓

고령층 근로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기 위해선 고령층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연 0.33%)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년연장…청년층 고용률 6.9% ↓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고용률 증가폭은 2016~2019년 2.3%포인트(p) 증가한 뒤 2020~2024년 1.3%p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시켰다.

2016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명) 감소했고, 상용직 고용률은 3.3%(4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조정 필요  
보고서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재고용하는 것이 노동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고령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0.9~1.4%p(연 0.1%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야권 “권한대행의 임명, 헌법 유린”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재판관 후임 이안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미임명 관련 ‘위헌’ 40일 만  
민주당 “韓, 스스로 탄핵 유도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안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라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은혁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현재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만에 이뤄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해왔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직’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다. 정부적으로 해석하면 마은혁 헌법재

판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기 위해 나머지 2명을 함께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의 지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안규 법제처장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을 갖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소매시장 경기전망지수 4분기 연속 하락

대한상의, 2분기 RBSI 조사

소매시장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에서 전망치가 ‘7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77)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유통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의는 체감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하방 우려, 정치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내외적 약세가 겹치면서 소비시장 부진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기업들은 올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4.0%), 국내정치 불확실성(39.2%), 운영비용 부담 증가(36.8%), 미국통상정책(16.8%) 등을 꼽았다.

소비시장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9.8%)가 2026년 이후에나 소비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후를 전망한 기업도 16.0%에 달해 상당수 기업들이 소비 부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용 기자 lsy2665@